

# 해남 농촌형 에너지 모델 ‘햇빛소득마을’ 조성 잔걸음

11개 읍·면 40개 마을 참여 의사  
수익금 전액 주민 배당·복지 환원  
전 주기 관리 마을 사업 부담 최소화

해남군이 주민이 주도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농촌형 에너지 소득 모델 확산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23일 해남군에 따르면 정부 국정과제인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에 발맞춰 관내 100곳 발굴을 목

표로 대대적인 홍보와 대상지 선정에 착수했다.  
‘햇빛소득마을’은 외부 사업자가 아닌 마을 주민이 조합을 결성해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체가 되는 사업으로 정부가 2030년까지 매년 500곳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현재 군이 선제적인 홍보 활동을 펼친 결과 11개 읍·면에서 총 40개 마을이 참여 의향을 밝히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여기서 발생한 수익은 주민들에게 현금으로 배당하거나 마을 복지사업, 공용 전기요금 절감, 취약계층 지원 등 지역 공동체를 위해 전액 환원

되는 구조로 운영돼,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설치 대상지는 마을의 여건에 따라 ▲유류부지(잡종지·경사면) ▲영농형(전·담·과수원) ▲지붕형(창고·축사) ▲공공부지(폐교·도로변)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발전 설비 규모는 마을당 300kW에서 최대 1MW 이내로 조성된다.  
해남군은 주민들의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추고 진입 장벽을 없애기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도 마련했다. 사업에 선정된 마을에는 태양광 설비 설

치 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과 연계해 총 사업비의 85% 이내에서 용자를 우선 지원한다.  
또한 마을 수요에 따라 전력을 저장해 효율을 높이는 주민참여형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시에도 보조사업을 연계해 수익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향후에는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ReSCO) 제도를 도입해, 태양광 발전소 기획부터 시공·운영·행정 지원까지 전 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마을의 사업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군은 현재 참여 의사를 밝힌 40개소에 대해 부지 여건과 주민 동의율, 사업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직 신청하지 않은 14개 읍·면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현장 상담을 강화해 목표한 100개소 참여를 조기에 달성할 방침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햇빛소득마을은 단순한 태양광 설치가 아닌, 주민이 주체가 돼 마을의 미래 소득을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이라며 “전 읍·면, 모든 마을로 참여를 확대해 해남형 햇빛소득 모델을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필용 기자

## 정기인사 앞둔 목포시, ‘인사쇄신’ 요구 분출

4급 80% 행정직…소수 직렬 확대  
핵심 요직 장기 재직 ‘고인물’ 도마위  
갑질 논란·뇌물수수 의혹 등 불거져

오는 2026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목포시 공직사회 내부에서 ‘인사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23일 목포시에 따르면 이번 정기인사 승진 대상은 4급(서기관) 1명, 5급(사무관) 1명에 불과해 대규모 이동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승진 폭이 좁을수록 인사의 원칙과 공정성은 더욱 엄격해야 한다”며 그동안 누적된 불만을 해소할 실질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가장 큰 불만은 ‘행정직 독식’ 구조다. 현재 목포시 4급 국장급 10명 중 시설직 1명과 보건소장을 제외한 8명이 모두 행정직으로 채워져 있다.  
특히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220여명에 달하지만 5급 사무관은 극소수이고 4급 국장은 단 한 명도 없다.  
건축·토목 등 전문성이 필수적인 부서장 자리마저 행정직이 차지하면서 형평성 논란과 전문 행정의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특정 보직 장기화에 따른 ‘고인물’ 부작용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일부 과장급이 핵심 요직에 2~3년 이상 장기 재직하는 과정에서 최근 ‘갑질 논란’과 ‘뇌물수수 의혹’까지 불거졌기 때문이다.  
내부에서는 이를 두고 “사전 정보 인사로 예

방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인사 실패”라며, 소위 ‘회전문 인사’를 타파하고 격무 부서 근무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 체계가 작동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 박효상 목포시의원은 “이번 인사가 단순한 자리 메우기에 그칠 경우 조직 내부의 불신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며 “전문성과 성과, 공정성을 기준으로 한 과감한 인적 쇄신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는 업무 연속성, 조직의 안정성과 민선 9기 출범을 대비해 부서별 업무 연속성과 조직 안정을 위해 전보 인사를 최소화하되, 변화가 필요한 곳은 교체할 방침”이라며 “효율적인 조직이 되도록 추진하고 직렬별 안배 등을 고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목포=정해선 기자



강진군 읍면은 최근 겨울철 폭설 시 교통 안전 확보를 위해 민·관 협력 제설단을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했다. <강진군 제공>

## 강진 읍면 ‘민관 협력 제설단’ 본격 가동

폭설 선제 대응…사각지대 해소  
강진군 읍면지역 겨울철 폭설로부터 주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민관 협력 제설단을 본격 가동한다.  
23일 강진군에 따르면 읍면지역은 지형적 특성상 지방도와 군도 대부분이 급경사가 심한

산간 도로로 이뤄져 있어 겨울철 폭설 시 교통 안전 확보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지역이다.  
이에 면은 민·관 협력 제설단을 구성해 제설 장비와 염화칼슘 등 필수 자재를 조기에 확보하고, 민·관 역할을 분담해 기존 공공 인력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웠던 제설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

침이다.  
또한 기상 상황에 따른 단계별 비상근무 체계를 운영하고, 사전 교육과 모의훈련을 통해 실제 폭설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민·관이 힘을 모아 폭설로 인한 교통 불편과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정영록 기자

## 진도군 동외호수공원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비 15억 확보

산림청 ‘녹색자금 공모’ 선정  
경사도 개선 등 보행약자 배려

진도군이 지역 대표 쉼터인 동외호수공원을 보행 약자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나눔길’로 재단장한다.  
23일 진도군에 따르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주관하는 ‘녹색자금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15억원을 확보했다.  
동외호수공원은 하루 평균 800여명이 찾는 진도의 명소지만, 일부 산책로의 경사도가 높아 노약자나 장애인 등 보행 약자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군은 이번 확보된 예산을 투입해 산책로의 경사도를 완만하게 개선하고, 휠체어 등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교행 공간을 확충해 이용 편의성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



진도군은 최근 산림청이 주관한 ‘녹색자금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사진은 김희수 군수(사진 왼쪽서 다섯 번째)와 군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진도군 제공>

다.  
아울러 단순한 정비를 넘어 진도의 자연 특성을 반영한 생태 휴식 공간도 함께 조성해 공원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동외호

수공원을 누구나 제약 없이 자연을 누릴 수 있는 지역 대표 녹색 힐링 공간으로 만들겠다”며 “군민의 일상에 여유와 쉼을 더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세권 기자



## 함평군, 道 인구정책 평가 ‘우수상’

함평군은 “최근 전남도가 주관한 ‘2025년 인구정책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정책 추진 체계와 정주 여건 개선, 생활밀착형 복지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함평군은 단순한 인구 유입을 넘어 사람이 정착해 살 수 있는 지역 기반을 체계적으로 조성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교육·장학 분야를 중심으로 한 장기적인 인구 유출 방지책이 호평을 받았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 정주형 통합 보건 서비스’도 우수 사례로 꼽혔다. 고령화가 심화된 지역 여건을 감안해 이동 진료 차량으로 의료 취약지를 직접 찾아가 진료와 기초 검진을 제공함으로써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한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냈다.  
함평군 관계자는 “단기적인 수치 늘리기보다는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교육과 보건·복지를 연계한 지속 가능한 인구정책을 통해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함평=기영규 기자

## 영광군 2천여 농가 경영 안정 나선다

39억 규모 직불금·보조금 지급  
하계작물 등 50만원 추가 보조

영광군이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의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23일 영광군에 따르면 쌀 적정 생산과 식량 작물 자급을 제고하기 위해 ‘전락작물직불금’과 ‘논 타작물 재배 지원 보조금’을 지난 19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번 지급 규모는 총 2천511농가(4천375ha)에 달하며, 금액은 39억2천600만 원이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동계작물(밀·조식료 등) 1천862농가(4천342ha)에 18억5천600만 원 ▲하계작물(가뭇쌀·콩·옥수수 등) 609농가(672ha)에 16억5천만 원 ▲논 타작물(일반작물 등) 40농가(34ha)에 8천500만 원 등이다.  
군은 농가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이중고를 겪는 농가에 실질적인 보탬을 주기 위해 정부 지원금

외에도 자체 예산을 투입해 하계 전락작물 및 논 타작물 재배 농가에 ha당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급 단가는 품목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전락작물 중 동계작물 밀은 ha당 100만 원, 조식료·식량작물은 ha당 50만 원이 지급된다.  
하계작물인 가뭇쌀·콩은 ha당 200만 원, 조식료는 ha당 500만 원, 식용옥수수·개는 ha당 100만 원이 지원된다.  
이밖에 논타작물 중 하계작물인 일반작물, 녹비작물, 다년생작물 등은 ha당 2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직불금과 추가 지원금이 농가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민들이 눈에 타작물을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다시 벼 재배로 회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 무안군 “겨울 진미 송어 맛보러 오세요”

해제 양간다리·수산시장 일원  
‘황금송어 잡기’ 등 행사 다채

무안군이 겨울철 최고의 별미로 꼽히는 송어를 주제로 한 미식 축제를 연다.  
23일 무안군에 따르면 다음 달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해제면 주민다목적센터와 양간다리 수산시장 일원에서 ‘2026 무안겨울송어축제’를 개최한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송어 튀김! 희망 날고!’를 주제로 진행된다.  
무안 송어의 참맛을 알리는 것은 물론 곱창돌김, 감태, 황토고구마 등 지역 대표 특산물을 판매하고 황토갯벌랜드, 도리돌 일출 등 주변 관광 자원과 연계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관광객들의 오감을 만족시킬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축제의 백미인 ‘황금송어를 잡아라’를 비롯해 송어와 고구마, 김, 굴, 새우 등 지역 농수산물을 직접 구워 먹을 수 있는 ‘구이존’, 직접 요리를 만들어보는 ‘송어 초밥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 등이 운영된다.  
무안 송어는 청정 갯벌의 유기물을 먹고 자라 ‘뱀만 먹어도 달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맛이 일품으로, 눈이 내리고 기온이 떨어지는 1월에 붉은빛 살이 가장 통통하게 차올라 찰지고 고소한 식감을 자랑한다.  
무안군 관계자는 “이번 축제는 무안 겨울 송어의 참맛을 느끼고 새해의 활력을 충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가족·연인과 함께 방문해 맛있는 음식과 함께 잊지 못할 겨울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김상호 기자